

# Tax News Flash

## EU Fiscal State aid 최신 동향과 시사점

November 12, 2014

유럽연합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는 ‘공격적인 세무전략 (aggressive tax planning)’ 이 유럽연합이 세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의 원칙 중에 하나인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, 이에 따라 EU 가입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에 속한 특정 기업에 정부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(State aid)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원했을 경우, 해당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EU 가입국의 불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국에 지원받은 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. 최근 들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State aid 와 BEPS 을 연관 지어 고려하기 시작했으며, 이에 따라 유럽연합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, 한국기업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State aid 에 대한 최근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.

### 주요내용

#### 1. State aid 대상은?

EU State aid 는 EU 가입국 및 European Economic Area (EEA)의 3 개국(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)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(undertaking)에 적용되는 사항임. ‘기업(undertaking)’이란 파트너십, 회사 및 고정사업장을 모두 포함함.

#### 2. State aid 는 무엇인가?

유럽연합집행위원회 (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

노르웨이의 경우 EFTA 감시위원회)의 승인 없이 EU 가입국은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해 State aid 를 지원할 수 없음. 이러한 규정은 유럽독점규제법에 따라 시행되며, EU 와 EEA 내 공정경쟁의 유지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(TFEU)과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의 EEA Agreement 임. EU State aid 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정부보조금뿐만

아니라, 특정 기업에만 제공되는 조세감면, 세제혜택 등 기업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포함함.

#### 3. State aid 의 형식은?

State aid 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짐; (1)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조세제도 (2) 개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예규(tax ruling) 및 조세합의안(tax settlement)의 형태로 주어지는 개별적 세금감면.

#### 4. State aid 는 언제나 불법으로 간주되나?

언제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, EU 가입국이 제공하는 State aid 가 EU 법에 부합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봄. 유럽공동체내부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름(결정 이후 항소 가능). 다만,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된 State aid 는 일단은 불법보조금으로 간주함.

#### 5. 만약 State aid 가 EU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

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가 (1) EU 가입국에서 기업 및 단체에 주는 세제혜택이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크거나; (2) 해당국 세법 자체가 부당하게 선택적인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,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해당국이 기업에 제공했던 세제감면 혜택을 모두 환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. 환수금액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미납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로, 조사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과거 10 년까지 복리이자가 적용됨.

#### 6. 해당국이 EU 또는 EEA 에 가입하기 전에 제공된 State aid 는 어떻게 되나?

해당국이 TFEU 또는 EEA 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소위 기존지원(Existing aid)의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아님. 다만, 향후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되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.

EC 가 최근 State aid 와 BEPS 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EU 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동향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

#### 7. 재정지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?

State aid 는 일반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(예: State aid 를 제외하고 계산된 세액)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계산함.

#### 8.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State aid 관련 움직임은?

2014 년 초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OECD 와 G20 의 BEPS Action Plan 과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절세계획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EU 의 자체적인 안건으로 EU State aid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음. 구체적으로 특정 예규 및 세제혜택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에 착수하였고, 해당 사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임.

#### 9. 현재 조사진행 중인 케이스들은?

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현재 이전가격세제 적용 및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 및 케이스를 조사 중에 있음. 현재 조사중인 2 개의 사례는 정상가격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State aid 관점에서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#### 10. State aid 규정은 이전가격적용에 국한되는가?

현재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는 이전가격규정의 적용 여부와 실질과세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나, State aid 는

사실상 선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여러 정책이나 합의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이전가격규정에 국한되지 않음.

**11. State aid 에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지?**

현재로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State aid 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더 진전이 될지는 알 수 없음. 더 진전된다 하더라도 조사방향은 미지수임. 다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State aid 와 이에 따른 조사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.

**12. State aid 가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기까지 소요되는 기한은?**

EU 가입국이 사전승인 없이 State aid 를 지원 하였을 경우, 일정 기한 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음. 해당 가입국과의 커뮤니케이션, 이슈의 복잡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 등의 요인에 따라 조사시작시점부터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한은 최소 1.5 년에서 2 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.

**13. 현재 받고 있는 조세혜택 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?**

해당 예규, 조세합의안 및 조세체계 등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타 EU 가입국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.

**14. 언제 기업은 State aid 판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?**

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위배사항일지라도, State aid 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판결은 전 EU 가입국에 적용될 수 있음. 대부분의 경우, 특정산업에 있는 구성원 등 여러 익명의 수혜자를 위한 세제혜택 및 감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. 공식적인 조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이해관계자는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.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 결론 중 해당 기업에 “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”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.

**15. 정부와 조세합의안 체결 시, State aid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?**

예규, 조세 합의서 또는 특정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과세관청과 새로운 Tax position 에 대해 논의할 때 State aid 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. 예규, 조세체계 합의서 등을 망라하여 EU 또는 EEA 가입국의 어떠한 조치라도 비정상적으로 관대하거나 호의적이라면 State aid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함.

## Contacts

국제조세 이상도 709-0288 sdlee@samil.com	내국세 주정일 709-0722 jjjoo@samil.com	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이희태 3781-9083 htlee@samil.com	금융세무 윤인희 709-0542 ihyun@samil.com
김성영 709-4752 sykim@samil.com	오연관 709-0342 ygoh@samil.com	헨리안 3781-2594 henryan@samil.com	박태진 709-8833 tjpark@samil.com
김상운 709-0789 swkim@samil.com	박승선 709-0621 sspark@samil.com	전원엽 3781-2599 wychon@samil.com	정훈 709-3383 hoonjung@samil.com
이동복 709-4768 dongblee@samil.com	황철진 709-0759 hcj@samil.com	조정환 709-8895 jwhancho@samil.com	글로벌 서비스 이중현 709-0598 alexlee@samil.com
신현창 709-7904 hcshin@samil.com	정찬우 709-0692 cwchung@samil.com	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-0538 yschung@samil.com	김주덕 709-0707 michaelkim@samil.com
조세불복 조남복 709-0501 njjo@samil.com	이영신 709-4756 yslee@samil.com	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이현종 709-6459 hyunjonglee@samil.com	조창호 3781-3264 changhojo@samil.com
	정민수 709-0638 minsjung@samil.com		서백영 709-0905 byseo@samil.com
	김진호 709-0661 jhokim@samil.com		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-0559 sksong@samil.com
	정복석 709-0914 bsjung@samil.com		

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©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d.